

# 수질오염총량제

## 03. 총량제 추진 체계 I

## 1. 총량제 관련 법제도

### 1)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

'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난개발로 인해 상수원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반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기존의 정책수단은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지역개발과 상수원 수질보호를 둘러싸고 상·하류 지역간 갈등은 더욱 격해졌다.<sup>1)</sup> 이에 정부는 유역관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98.11)>을 필두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99.12)>,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00.10)> 및 <영산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00.10)>이 수립되었다.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은 수질오염 예방대책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제)의 도입계획을 제시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총량제의 기본구조, 시행방안, 일정 등 제도의 도입·시행과 관련된 사항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표 1). 당시 계획은 '02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는 '02년부터 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부하량이 큰 시지역은 '03년부터, 오염부하량이 적은 군지역은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총량제를 시행하되, 연평균 수질이 BOD I등급을 유지하는 기초지자체는 총량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표 1.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중 총량제 관련 내용

총량관리제도 시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부하량 총량을 지자체가 스스로 관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목표 달성을 조화</li> <li>- '02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취득</li> <li>- 광역시는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02년부터 총량제 시행</li> <li>-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 부하량이 큰 시지역은 '03년부터, 오염부하량이 적은 군지역은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 연평균 수질이 BOD I등급을 유지하는 기초지자체는 총량제 시행을 유보</li> </ul>
총량관리제도 기본골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D를 원칙으로 하되 COD, 질소, 인, 기타 오염물질 등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li> <li>-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연구팀 구성 및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연구재원 지원</li> <li>- 조사연구팀은 추가 관리항목 적용시기 및 하천구간별 목표수질기준 조정방안 검토</li> <li>- 점오염원 외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li> </ul> </li> <li>· <b>오염총량 할당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구역별 또는 소유역별로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전환</li> </ul> </li> <li>· <b>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지자체별 오염총량을 할당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시달</li> <li>- 광역자치단체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li> </ul> </li> </ul>

1) 환경부. 2014. 유역관리정책 : "상생의 강, 화합의 강으로". 환경정책 Br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여 낙동강수계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받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li> <li>-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 보고</li> <li>- 오염총량관리계획에는 계획기간 중 배출부하량 전망, 오염물질 연차별 삭감계획, 지역개발계획 등을 포함</li> <li>· <b>오염총량 관리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는 배출부하량과 삭감부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형식의 오염총량관리대장을 작성, 할당받은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li> <li>- 시장·군수는 매년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결과 평가보고서를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li> <li>- 시장·군수에게 오염총량 준수를 위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li> <li>-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 상황이 부실한 시·군에 대해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li> </ul> </li> </ul>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상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li> <li>· 2000년 중 오염총량관리항목 추가를 위한 조사연구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관리항목 적용시기 및 하천구간별 목표수질 기준 조정방안 제시 (2000년 중)</li> <li>- 정부방침 확정 (2001년)</li> </ul> </li> <li>· 2001년까지 오염총량관리 실시를 위한 오염원 정밀조사 및 제도연구 용역 실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구역별, 지자체별 배출부하량 총량 할당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li> </ul> </li> <li>· 2000년 중 광역자치단체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광역시(2002년), 시·군(2003년~)</li> </ul> </li> </ul>

자료: 환경부. 1999. 낙동강 생명찾기 대장정: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2) 4대강 수계법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99년 1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02년 1월 나머지 3대강 수계에 대한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1)」,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1)」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1)」이 제정되었다.<sup>2)</sup>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에 제시된 총량제도의 골격이 4대강 수계법에 반영되었으며, 법조항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결정·제시하며, 총량관리 목표, 대상 오염물질,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시·도지사는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세부적인 지역개발계획, 관할 지역 내 배출부하량 총량 및 연차별 삭감계획,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추가 배출부하량 및 삭감계획 등이 담긴다.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도

2) 환경부. 2004.3.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편람.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하여금 전년도 총량제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방환경관서장은 지자체장이 매년 제출하는 이행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각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대강 수계법은 할당부하량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나 총량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이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에 의해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설을 개선·보완하더라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심각한 경우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에 대해 초과총량부과금이 징수된다. 초과총량부과금은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배출자가 얻는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 지역 및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허가가 제한된다. 해당 지자체가 이러한 제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환경관서가 이행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요청한 조치·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원 중단·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4대강 수계법은 총량제 시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질관리가 중요한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시·군에는 다른 지자체에 우선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자체가 총량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허가가 제한되며, 총량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자체의 규제순응(compliance)이 확보될 수 있다

**표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총량제 관련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결정·고시</li> <li>·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량관리 목표, 대상 오염물질,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li> </ul> </li> <li>· (환경부장관) 총량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li> <li>· (환경부장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연구반 구성·운영</li> </ul>
제10조 (오염총량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취득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li> </ul>

조항	주요 내용
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지역개발계획 세부 사항, 관할 지역 배출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추가 배출부하량 및 삭감계획 등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시장·시장·군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 (광역시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지방환경관서장 승인 취득, (시장·군수) 관할 도지사 경우 지방환경관서장 승인 취득</li> <li>· (광역시장·시장·군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지방환경관서장·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제출</li> <li>· (지방환경관서장) 이행 평가보고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대책의 수립·시행 요구</li> </ul>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대상 자에 대해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li> <li>· (환경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li> <li>· (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당사자)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측정기기 부착·가동, 측정결과 기록·보존</li> <li>· (환경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초과 배출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 명령</li> <li>· (조치명령을 받은 자)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명령 이행 즉시 보고</li> <li>· (환경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조치명령 미이행 또는 할당부하량/지정배출량 초과 지속 시 조업정지(~6개월) 또는 시설 폐쇄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개선·보완에도 불구하고 할당부하량/지정배출량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 폐쇄 명령</li> </ul> </li> </ul>
제13조 (총량초과 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할당부하량/지정배출량 초과 배출자에 대해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li> <li>- 총량초과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li> <li>-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 미납부 시 가산금 징수</li> </ul> </li> </ul>
제14조 (과징금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광역시장·시장·군수) 할당부하량/지정배출량 초과 배출자에 대해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3억원) 부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은 사업장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 미납부 시 가산금 징수</li> </ul> </li> </ul>
제15조 (허가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시·도지사/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행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제한 지역·기간 및 대상 사전 공고</li> </ul> </li> </ul>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할당부하량 초과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미수립/미시행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한 승인·허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의 설치</li> </ul> </li> <li>·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불이행 제재 규정 위반 또는 이행평가보고서에 따른 필요조치·대책의 미수립/미시행 시 조치</li> </ul>



조항	주요 내용
	-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제한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광역시·시·군 대상 오염총량관리 소요비용 일부 지원 가능 - 댐주변지역 관할 광역시·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우선하여 지원 가능

자료: 법제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서는 '02년 제정된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량제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총량제 시행을 위한 기본방침이 '02년 10월(낙동강수계) 및 11월(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제정되었으며,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인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이 '03년 9월(낙동강수계) 및 '04년 4월(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확정·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의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04년 7월부터 총량제 1단계('04~'10)가 시행되었다. 총량제 2단계('11~'15)부터는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총인(T-P)이 추가되었으며, '16년부터 총량제 3단계('16~'20)가 시행된다.

한강수계의 경우, '98년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수립 당시 이미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지역에 총량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 때문에, 의무적으로 총량제를 시행하는 다른 수계와는 달리 경기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팔당상수원 지역에 총량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합의가 진행되었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거쳐 '08년 11월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자회의>에서 한강수계에 대해 총량제 시행을 의무화하기로 확정되었으며, '11년 6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총량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의 경계지점에 대한 BOD와 T-P의 목표수질이 '11년 6월 확정·고시되었으며, '13년 6월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대한 총량제('13~'20)가 시행되었다. 강원·충북·경북 등 26개 지자체는 서울시 등 하류 지자체의 시행 성과를 반영하여 총량제 다음 단계가 시작하는 '21년부터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sup>3)</sup>

한강수계에서 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3). 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 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 총량관리기본계획(광역시·도) - 총량관리시행계획(시·군)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할당부하량 미준수 배출자에 대해 총량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수단도 확충된다.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총량제 시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군별로 총량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

3) 환경부 보도자료. 2010.6.3. 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하여 지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전 임의제에서는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지만, 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수계기금에서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3> 총량제 임의제 및 의무제 추진방식 비교<sup>4)</sup>**

구분	임의제	의무제
계획 범위	시·군 행정구역	단위유역
계획 수립방법	관리계획	기본계획(광역시·도), 시행계획(단위유역)
관리목표	목표수질 또는 할당부하량	목표수질
목표 설정방법	환경부장관과 협의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고시
기준유량	저수기	대상물질별로 설정
승인기관	환경부	기본계획(환경부), 시행계획(광역시·도시자 및 지방환경관서장)
계획 미 이행시 제재수단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 신·증설 억제	총량부과금 부과
목표수질 설정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목표수질의 타당성 검증)
계획 수립기간	별도 규정 없음	기본방침으로 규정
관리계획의 연속성	해당 시·군 의지에 좌우 (중장기적 계획 수립·추진 어려움)	기본방침으로 시행시기를 규정 (중장기적 계획 수립·추진 가능)
시행기반	부재	각종 기술지침 수립, R&D 사업 추진 등
전문인력	시·군별 전담인력 확보 어려움,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가 가능한 지역 전문기관 미비	시·군별 전담인력 배치 가능, 지역 전문기관 확대 가능
수계기금 활용	총량계획 수립비용 시·군 부담	총량계획 수립 비용 수계기금 지원

4) 환경부. 2009.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 추진방향. 2009.11.19. 2009년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 공무원 교육자료. (재구성)

## 2. 총량제 관련 기관·주체별 역할

### 1) 중앙 및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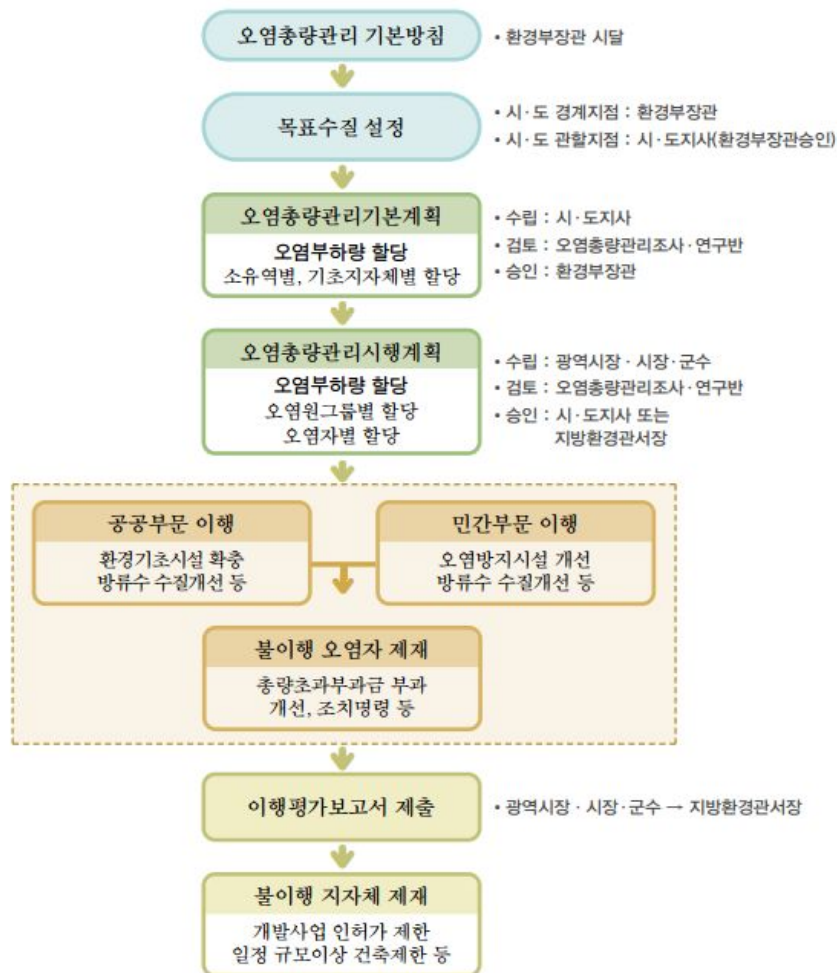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총량제 계획수립 및 시행 절차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4대강 수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다. 환경부장관은 또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한다(광역시·도 관할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설정). 1차시에서 설명했듯이 목표수질은 총량관리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값으로 상수원수, 농업용수 등 물이용 용도, 오염원 밀도, 지역개발 정도, 환경기초시설 투자정도, 수질·수량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광역지자체는 위 지침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소유역별·기초지자체별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이 담긴다. 다시 말해, 총량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시·도 관할구역 내 단위유역별·소유역별·기초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이 정해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단위유역별·기초지자체별 할당부하량에 맞춰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이 연차별로 제시된다. 이때, 삭감계획에는 개별오염원별로 할당부하량이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광역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은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기초지자체장은 할당받은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수행하며, 매년 총량제 운영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량제 운영이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설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림 1> 총량제 시행절차<sup>5)</sup>

## 2)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처럼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오염부하량이 할당되거나 배출량이 지정될 수 있다. 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당사자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며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역, 시설내역 및 개선내역, 측정기기 부착 내용 등을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총량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할당대상자에게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가동하고, 측정결과는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사업자(배출시설)가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명령이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에 의해 내려지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명령을 이행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오염부하량 측정기기를 설치·가동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

5) 환경부. 200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갑니다.

가 부과된다.

### 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총량제 시행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 조사 및 연구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사·연구반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당연직 반원)과 관련 연구기관·학회,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한 물관리 전문가(위촉반원)로 구성된다. 조사·연구반은 총량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목표수질 설정에 필요한 수계 특성의 조사·연구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는 조사·연구반의 업무수행 및 지원을 위해 '수질총량관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사·연구반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수계기금의 용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sup>6)</sup>

#### [참고문헌]

- 환경부. 200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갑니다.

6) 환경부훈령 제859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